

4.13 총선과 진보정당의 진로

1987년 이후 한국 사회는 민주주의 이행을 계속해 왔다. 두번에 걸친 민간정부의 집권은 군부를 정치권에서 완전히 퇴장시켰으며, 절차상 민주주의에서 상당한 진전을 가져왔다. 그러나 정치는 여전히 기득권세력의 수중에 볼모로 잡혀 있으며, 사회의 계급구조를 반영하지 못하는 전근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공주의와 지역주의라는 퇴행적인 구조와 의식에 뿌리박은 정치구조는 근대적 의미의 “계급정치”를 가로막고 있으며, 이는 한국 정치의 발전을 자체시키고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4·13총선에서도 이러한 전근대적 정치구조는 극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호에서는 한국의 정치구조에서 사회정치세력으로 성장하려는 진보정당이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지 살펴보았다.

한국의 정치구조와 계급정치의 미래

오삼교

4.13 총선과 민주노동당의 진로

이광호

〈자료1〉 주요 정당 총선 공약

〈자료2〉 주목할 후보들



한국의 정치구조와 계급정치의 미래

집보장자

오삼교

위미대교수 정치학

1. 들어가는 말

민주노동당이 기대했던 것만큼 뜨고 있지 않다. 원래 한국적 정치지형에서 큰 기대를 하기 는 어려웠으나, 여론조사에 의하면 이번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의 진로는 그렇게 평坦치 않은듯 하다.

IMF 위기가 물고온 실업자 증가와 재벌위주의 경제 질서에 대한 환멸,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권을 대체할 새 정치의 요구 등 객관적 사회환경을 보면 이번 선거는 민주노동당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면서 부상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기회다. 그런데도 정치판의 틀이나 언론의 관심은 지역감정과 3김1이의 정치게임에만 뚝 빠져 있다. IMF위기로 야기된 실업자 문제나 사회복지의 쟁점들은 경기회복으로 어느 새 국민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으며, 전통적으로 한국정치의 지형을 결정해 온 지역

주의, 인물주의, 보스주의, 상호비방과 헐뜯기가 정치판을 “감상”의 대상으로 만들어 놓고 있다.

총선을 둘러싼 정국이 진보진영에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의 자원부족 혹은 전략적 판단 문제인가 아니면 한국 정치의 틀은 원래 계급정치의 전개를 혀용하지 않는 구조를 가진 것이기 때문인가. 한국 정치판의 오물들은 왜 이렇게 견이내기 어려운 것이며 새 판을 짜는 일은 왜 어려 힘든가. 이 글안에는 어려 저리 두서없이 떠오르는 생각들을 정리하면서, 한국의 지형에서 노동정치의 앞날에 영향을 미칠 여러 요소들을 검토해 보고, 그 함축성을 따져 보고자 한다.

2. 계급정치의 조건들

먼저 여기에서 필자가 의미하는 계급정치의 개념을 간단히 이야기해보자. 계급정치는 계급간의 갈등이나 이를 표출하는 정체의 차이가 정치의 주요 쟁점으로 나타나는 정치구도를 의미한다. 흔히 정치판이 보수·진보의 대립구도로 짜여져야 지역감정 정치의 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할 때의 의미와 흡사하다. 따라서 계급정치는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다양한 사회 이익이 표출되면서도 경제성장이나 분배에서 노동자의 이익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가 중요한 관심이 되는 정치사회적 활동을 총칭한다. 이를 위해서

는 노동자계급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동자 조직이나 정당의 발전이 선결조건이 된은 물론이다. 따라서 계급정치는 노동자 정당이 정치사회의 주요 행위자로서 공공정책의 제기와 선택에서 다른 정치사회세력에 대하여 정치적 대결과 타협의 중심적 행위자로 등장할 때 가능하다. 이러한 계급정치는 주로 사민주의 계열의 정당이 발전한 유럽에서 전개되어 왔다. 특히 사민당 정부의 주도하에 노조의 정체참여가 보장된 이차대전 후부터 70년대까지의 사회적 조합주의(social corporatism)는 계급정치의 하나의 전형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계급정치의 발전에 궁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조건을 생각해 보자.

(1) 계급정치는 사회의 갈등구조가 노동과 자본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사회에서, 그리고 그러한 계급구조가 사람들의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때 가장 잘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 계급갈등은 그 사회의 주요 정체성(identity)이 개인주의거나(미국의 경우), 공동체 전체의 생존과 관련된 다른 상위의 갈등구조(전쟁상황의 빌랄파 같은)에 의해 형성될 때 사회적으로 부차적 위치에 머물게 되며, 이러한 사회에서는 계급정치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2) 계급정치는 노동계급의 이익을 정치적으로 반영하는 노동자 정당의 발전

을 전제로 한다. 이는 또한 계급적 요구의 정당성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아야 가능하다. 이는 노동계급이 계급 전체로서 억압당하는 역사적 계기 속에서 계급적 연대가 형성되거나 계급적 억압의 결과가 그 사회의 정의 기준에서 크게 벗어날 때 가능하다. 따라서 계급정치는 계급갈등이 사회전체의 생활으로 등장할 때 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계급갈등이 억압되는 사회에서는 계급정치의 발전 계기도 억압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3) 계급정치는 또한 노동자의 계급적 연대가 형성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것은 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노동자 계급의 불평등이 심화되거나 생활수준이 악화되는 경우에 가장 잘 발현된다. 물론 그러한 객관적 상황이 반드시 계급정치의 발전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며, 사회적 가치나 축적의 조건이 노동자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4) 계급의 구성원이 스스로를 계급으로 인식하는 것을 방해하는 가치가 지배적인 사회에서는 계급정치의 요소가 크게 약화된다. 전통적 사회구조의 기부장적 가치관은 이 점에서 개인의 위치를 계급 안에 두지 않고, 가문·지역·학벌 등의 연고 속에 둘으로써 계급정치의 발전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5) 사회구성원들에게 계급정치가 사회적 평등과 정의의 고양, 사회의 인간화 그리고 사회발전의 조건으로 인식될 때 계급정치는 발전한다. 계급정치가 사

회적 불안과 혼란, 편협한 특수이익의 표현과 동일시될 때 계급정치는 정상적 발현이 억제된다. 따라서 계급정치는 계급 대립을 상정하면서도 편협한 계급 이익을 넘어서는 비전을 제시할 때 사회적 정당성과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

이상의 조건을 보면 계급정치가 발전될 수 있는 사회는 다음과 같다.

- 그 사회의 주된 정체성이 계급을 기반으로 형성되는 사회
- 계급적 요구가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이를 위한 정치조직이 발전한 사회
- 자본주의의 발전과정에서 계급적 연대의 성숙을 경험한 사회
- 가치구조나 이데올로기가 계급적 정체성이 요구에 개방적인 사회
- 계급조직의 역할이 사회적 평등과 정의, 넓은 의미의 발전에 기여하는 역사적 기회를 가진 사회

이러한 조건이 계급정치 발전을 위한 모든 조건을 다 나열했다고 할 수는 없다. 또 구체적 역사적 경험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는가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각기의 조건이 계급정치 발전에 기여하거나 혹은 그것을 저해할 것이라는 것은 논리상 큰 무리가 없다고 본다. 그러면 이러한 조건이 한국의 경우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살펴보자.

3. 한국의 계급정치 조건과 정치구조

① 한국의 경우에는 자본주의에 고유한 노자대립 구조가 남북한간의 군사대립 구조에 의해 부차적으로 되면서, 또 한국전쟁의 경험으로 노동계급의 무기(이념, 조직, 동원)이 불온시되면서 계급정치가 발전할 수 있는 지평이 크게 축소되었다. 1987년 민중항쟁으로 정치공간이 확대된 후에야 노동계급의 동원이 가능하게 된 것이 이를 말해준다.

② 노동계급정치의 발전에는 사회적 정당성 획득이라는 측면에서 민주화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브라질 노동자당(PT)의 발전에는 노동자계급의 동원이 권위주의에 저항하는 민주화 운동의 하나로 인식된 것이 중요한 요인이었다. 한국의 경우 노동계급의 동원이 민주화의 물결을 주도하면서 주도적 정치 세력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민주화의 물결을 업고 민주화가 제공한 정치공간을 이용하여 뒤늦게 전개되었다. 이는 노동운동과 계급정치에 유리한 지형은 아니다.

③ 특히 한국과 같이 기업별 노조 하에서 노동자의 요구가 개별 기업의 틀 안에서 결정될 경우 시민사회 안에서 노동계급의 역사적 정당성과 보편성을 획득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어 지는데 이 때 노동자의 동원은 계급적 동원이 아니라 이익집단적 압력행사로 비춰진다. 특히 한국의 노동운동을 주도하는 조직이 대부

분 형편이 상대적으로 나은 재벌기업의 노조라는 점은 노동운동의 위상을 노사 관계의 한 단면 정도로 축소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④ 한편 한국의 경제성장의 계기가 노동역압적인 국가-재벌 연합에 의해 주어졌다라는 점도 계급정치의 발전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일제와 전쟁직후의 빈곤에서 탈출하는 계기가 정부주도의 대외 의존적 수출드라이브에 의해 마련됨으로써, 또 이러한 발전 연합(소위 '근대화' 세력)이 사회의 지배세력을 구성하면서 노동계급 정치가 사회적 호소력을 가질 여지는 더욱 축소되었다. 안보와 성장의 양대 축이 지난 수십년간의 한국발전프로젝트의 핵심이었고, 이 프로젝트는 한국을 절대빈곤국가에서 중진국으로 이끌어 내는데 성공하였다. 국가안보 이데올로기와 성장제일주의를 가치로 한 우익 보수정권이 현실적으로 이룩한 소득수준의 상승이 계급정치가 발전할 수 있는 공간을 거의 절멸시켰다고 해도 좋을 환경을 만들어 냈 것이다.

⑤ 이는 대중에 대한 호소력 측면에서 도 다른 나라보다는 비교적 나은 경제적 분배(웬만한 노동자나 시장 아줌마도 자가용을 굴리게 된 현실)로 급진적 이념을 중심으로 한 계급연대의 사회적 필요성을 감소시켰다. 이러한 경제성장의 결과로 최근 경험하고 있는 광범위한 소비주의, 중산층의 부동산 및 주식투자 열풍, 요새는 거의 누구나 가지고 다니는 자가용이

나 핸드폰 컴퓨터, 한국 기업이나 스포츠의 세계적 진출 등이 일반 국민의 관심을 흡수하면서 대안 세력이나 대안적 발전전략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큰 빈향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 솔직한 현실이다.

(6) 한국의 계급주의는 전통적 가치관, 특히 가부장주의의 광범위한 흡착에 의해서도 크게 저해되어 왔다. 가부장주의는 사회를 권위적 위계질서의 체계로 보며 구성원이나 구성집단의 자율성을 경시하고 억압한다. 한국에서 유교적 가부장주의는 정치사회의 측면에서 학벌주의와 지역주의로 나타난다. 재벌은 바로 그 경제적 투영의 한 면이다. 또 사회의 하부구조에서는 선후배관계나 개인적 인간관계에 따른 의리가 중요시된다. 휴리성과 자율성은 오직 노동자와 국민을 경제적으로 동원할 때만 운용될 뿐이다. 이 모두는 기본적으로 연고중심주의라는 공통점이 있다. 한 개인의 사회적 좌표에 대한 인식이 계급이라는 경제사회적 갈등구조에 기초하지 않고 우연에 의해 결정되는 연고에 기초할 때 계급주의는 발전되기 어렵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한국의 정치지형은 계급정치가 발전할 수 있는 소자를 처음부터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결론이 된다. 남북분단과 이로 인한 정치적 스펙트럼의 편향성, 보수우익이 주도한 경제성장 전략의 성공, 기업별 노조에 의한 계급연대의 분산효과, 민주화

와 연결되지 못한 노동계급 동원, 그리고 사회에 만연한 가부장적 권위주의 질서는 경제적 분배의 휴리성을 추구하는 계급주의의 발전에 부정적으로 작용해 온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한국 좌파의 정치적 취약성은 전략적 선택 혹은 운동노선의 문제라기보다는 구조적 토양의 문제라는 성격이 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겸토가 정치사회적 행위자의 선택의 중요성을 경시하는 것으로 결론지어져서는 안될 것이다. 흔히 구조주의적 시각은 행위자 선택의 한계를 강조하는 측면이 있으나, 구조를 바꾸는 힘 또한 행위자의 인식과 선택에서 출발한다는 점 역시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필자는 한국에서의 계급주의 혹은 계급정치의 발전 전망과 계급주의가 역사적 보편성을 획득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점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3. 계급정치를 둘러싼 환경변화

하나는 자본축적 패턴의 변화와 관련된 문제이다. 노동계급 동원 혹은 연대감의 형성에는 동질적 환경을 공유하는 계층적 이동이 제한된 노동대중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최근의 변화, 특히 정보화와 세계화는 전통적인 노동의 성격 규정에 큰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최근 인터넷산업이나 벤처산업의 열풍에서

보이듯 지식은 노동의 요소만이 아니라 생산수단으로서의 성격도 겸비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문의 노동자는 언제든지 고용주 혹은 자본가로 전화될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다. 또한 경제가 세계화되면서 일국 차원에서 노동이라는 생산요소의 중요성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경제의 세계화와 정치의 일국적 형태간의 긴장은 최근 서유럽에서의 제3의 길에 대한 논의에서 나타나듯 계급주의를 토착화하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통적으로 계급주의의 기반이었던 제조업이 자본축적의 선도적 역할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서 노동운동 안에서도 사무직의 역할이 중시된 것은 이미 오래 전의 일이다. 여기에 지식산업의 노동/자본적 요소를 겸비한 양면적 성격, 사회구성에서 전통적 노동자 집단의 수적 감소, 세계화로 인한 노동의 자본에 대한 교섭력 감소, 중산층 확대와 다양한 생활패턴 및 문화적 가치의 확산은 전통적인 노자 이분법으로는 파악되지 않는 새로운 역동성을 만들어내고 있다. 계급적 차취와 차별, 억압에 대한 저항이라는 전통적인 계급주의의 인식구조를 재검토할 때가 된 것이다.

앞으로는 자본을 자본가 계급이 전유하는 차취의 수단으로만 인식해서는 자본과 노동의 새로운 역할 구조의 역동성을 파악하고, 현실의 경제구조에서 사회발전과 인간개발을 위한 자본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이슈의 중요성을

경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물론 신자유주의가 초래하는 세계적 규모의 불평등 악화 현상이나 노동강도의 강화 등의 문제점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자본축적 패턴과 노동의 구성 및 역할 변화가 갖는 의미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이러한 경향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노동계급의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필자가 주목하는 부분은 경제의 양극화라는 구조적 양상과는 무관하게 생활과 가치의 측면에서는 다양성과 다원주의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단순히 계급적 혀위의식이라고 치부하는 것은 인간생활에서의 가치 측면이나 의미의 중요성을 경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인간생활의 정신적 측면을 경제주의에 종속시키는 것은 제도권 정치에서 유권자의 마음을 사려는 노동자정치 세력화의 전략에 대처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평등과 인간화를 지향하는 이상주의의 폭을 크게 축소시킬 것이다.

4. 자유주의의 재검토

여기에서 한국 좌파가 지금까지 무시해온 자유주의의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운동권에서 좌파는 흔히 부르주아의 지배아이데올로기로만 인식되어 왔다. 이는 역사적으로 자유주의의 내용을 구성해 온 시장논리의 측면에서 보면 맞는 말이지만, 자유주의의 핵심성은 경제

논리를 넘어서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정치적 측면에서 자유주의는 현대 민주주의의 기초이다. 인권 언론 출판 및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바로 자유 민주주의이다. 그 발전과정에서 자유주의는 정치적으로 민주주의와 결합되어 이미 보편성을 획득하고 있다.

자유주의의 또 다른 측면은 개인 선택의 자유와 공동체의 자유에 대한 보장이다. 자유주의는 개인적 삶의 의미·목적·수단을 개인이 선택한다는 측면에서 인간의 발전과 성숙을 지향할 뿐만 아니라, 인간 및 집단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원칙을 제공한다. 즉, 개인과 집단이 자율적으로 스스로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이에 걸맞는 게임의 룰을 형성해 간다는

점에서 한 문명의 사회적 룰을 결정해 간다. 자유주의의 원칙 하에서 이 룰은 여러가지로 나타난다. 자유주의의 사회적 발현을 다원주의로 인식한다면 개인과 집단의 여러 수준에서 복잡한 상호관계를 통하여 특정 정책 혹은 아이디어를 중심핵으로 하여 공식/비공식적 네트워크가 형성된다. 수익자 부담원칙 등은 자유주의의 직접적 적용이나 간접적으로는 네트워크간의 역관계나 합의의 정도에 따라 자유주의의 단순한 적용을 넘어서는, 즉 보다 넓은 의미의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복지 및 공동체적 유대의 확대까지도 포함될 수 있다. 자유주의를 원자적으로 고립된 개인들의 사회체제내 선택에 국한시키지 않고, 보

다 적극적 의미에서 삶의 양식을 선택하는 것까지도 포함할 경우 자유주의의 지평은 편협한 개인 이익 추구의 한계를 넘어서까지 적용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원하는 공동체를 구성하고, 그 공동체의 생활양식과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능력을 스스로 획득하고, 또 이의 보장을 정치사회에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다. 만약 계급정치의 지평이 이 수준까지 확대된다면 계급주의에 내재한 특수성을 극복하고 보편적 삶의 가치로 고양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점에서 자유주의의 한국적 적용이라는 아이디어는 계급성이 보편성을 획득할 수 있게 하는 훌륭한 무기가 될 것이다.

5. 한국 계급정치의 진로

계급정치를 인간의 발전과 평등을 지향하는 문명의 창조라는, 보다 큰 이상주의 혹은 진보주의의 역사적 전개 과정의 하나라는 시각에서 보면 계급정치는 그 자체로서 자기완결적 체제를 구성하는 단위가 되진 못한다. 기존의 계급정치는 역설적으로 자본주의의 계급구성체제가 극복되는 순간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계급정치의 구체적 내용을 결정하는 구성요소가 유동적인 지금과 같은 시대에서 계급적이면서도 계급의 편협성을 넘는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구체적으로 계급정치가 역

사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이슈를 선점하고 개발하여 새로운 비전으로 연결시키는 작업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계급정치가 보편성을 획득할 때, 다른 계급이나 사회집단을 포용하면서 새로운 문명을 건설해 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이익의 다양성, 개인의 정체성과 행복추구 문제를 도외시하는 경제적 의미만의 계급주의는 계급정치의 빈곤만을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 계급정치가 역사적 성장과 보편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일상에서의 삶의 풍요성과 의미, 인간의 존재 문제를 두루 끌어안는 문명적 시작을 함께 고려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경제적 분배의 불평등 문제는 생활수준의 향상과 다양한 생활패턴이 유지되는 사회에서는 이전과 같은 호소력을 갖지 못한다. 또한 자본이 정보화·세계화라는 문화적 합축

성이 강한 사회변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할 때 노동계급의 이슈 선점 능력은 크게 뒤떨어지기 마련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고용과 임금을 보호하기 위한 시도가 기존의 생산구도에 집착하는 보수적 양상을 띠므로써 사회변화를 선도하는 계급정치의 진보적 내용이 약화될 뿐만 아니라, 이를 지탱할 사회적 지지 세력을 발견하고 개발하는데 뒤처지는 결과가 초래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유감스럽게도 필자는 이에 대한 답변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필자로서는 일단 문제 제기에 만족하고자 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있다. 새로운 비전과 전략 제시는 누구 한 사람의 과제가 아니라 여러 선진적 연구자들과 운동가, 노동자 대중이 이루어내는 집단적 노력과 모색 속에서 찾아져야 한다는 점이다.

**거짓말을 하지말며, 쉽게 승리하리라고
말하지 말라(Tell no Lies, and Claim no Easy
Victories).** - 아프리카의 흑인해방운동가 아밀카 카브랄